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보고 및 전문가 토론회

- * 일시 : 2011. 12. 20(화) 14:00 ~ 17:00
- * 장소 : 교보생명 23층 세미나실(서울 광화문)
- * 주최 : 보건복지부
- * 주관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단
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KOREA COUNCIL OF CHILDREN'S ORGANIZATIONS

목 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소개

방석배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9
----------------------------	---

주제발표1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의 정부 이행방안을 위한 방향성 제시
 김경희 교수 (목포대 아동학과,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13

-폭력, 착취, 체벌, 학대 및 방임 등 아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중심으로-

김지석 교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35

이은주 교수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51

김형모 교수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55

전영순 본부장(월드비전 국내북한사업본부) 61

전미선 부장 (굿네이버스 국내사업부) 65

김영지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9

유숙경 소장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73

파 77

프로그램

시 간	진 행 내 용
13:40~14:00	등록확인
14:00~14:10	사회 : 이해진 부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인사말 / 임송자 사무총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
14:10~14:40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소개 / 방석배 과장(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14:40~15:20	[주제발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 김경희 교수(목포대 아동학과,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15:20~15:30	휴 식
15:30~16:30	좌장 : 이배근 회장(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토론] 이은주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영순 본부장(월드비전) 전미선 부장(굿네이버스) 김영지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숙경 소장(어린이재단)
16:30~17:00	질의응답 및 정리

발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소개
방석배 과장(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소개

방 석 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장)

주제 발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의 정부 이행방안을 위한 방향성 제시

김경희 교수(목포대 아동학과,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위한 제안

-폭력, 착취, 체벌, 학대 및 방임 등 아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중심으로-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의 정부 이행방안을 위한 방향성 제시

김 경 희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I. 서 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의 모든 국가의 아동들에게 큰 변화를 약속하는 국제적인 문서로서 아동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 국제사회의 염원을 담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44조 1항에서 협약이 발표된 후에 2년 이내에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진전상황을 유엔사무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후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한국 정부는 세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홍보와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인권관련 NGO 단체들도 정부의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¹⁾. 보고서를 심의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각 보고서에 대해서 권고의견²⁾을 한국정부에 보내왔다. 권고문의 내용을 보면 1차부터 3/4차 까지 반복되는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이행노력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진한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번 이상 계속적으로 권리되고

1) 1995년 7월에 제1차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2년 6월에 제2차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10년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되었고, 2011년 9월에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2010년 민간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한국NPO연대에서 제출하였다. NPO연대는 한국 NGO들의 연합체로서 2005년에 설립되었다. 본 dsu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리고 교육하고, 정부의 협약이행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협약이 현장에서 실현되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본 민간보고서는 국가보고서의 비판서나 평가서가 아닌, 한국이 인권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아동인권선장을 위해 필요한지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9월 21일 열린 제1644차와 제1645차 회의에서(CRC/C/SR.1644 및 CRC/C/SR.1645 참조) 대한민국의 제3,4차 통합 정기보고서(CRC/C/KOR/3-4)를 심사했으며, 2011년 10월 7일 열린 제1668차 회의 (CRC/C/SR.1668 참조)에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위원회의 보고지침에 따라 제3, 4차 통합 정기보고서(CRC/C/KOR/3-4) 및 쟁점목록에 대한 서면답변(CRC/C/KOR/Q/3-4/Add.1)을 제출한 것을 환영하고 보고서의 분석적이고 자기비판적인 성격을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의 고위급 대표단과 가진 건설적인 대화에 대해 감사히 여긴다고 하였다.

있는 문제는 유보철회, 차별철폐, 조종,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모니터링센터/옴부즈제도, 아동의 의견존중, 체벌금지, 교육의 목표-교육정책검토, 아동권리인식증진 (홍보, 인권교육/훈련), 입양, 예산, 성 착취, 학대/방임, 소년사법, 이주자녀에 관한 사항들이다.

한국은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의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아동 관련 예산의 확대, 아동정책 추진 체계의 정비 등을 추진하였다³⁾.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 의료, 레저등 아동기에 적절한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비용이 높을 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연간소득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reasury, 2008). 즉,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년간 수차례 바뀌었다. 정부의 성격에 따라 아동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아동권리협약 비준이 의미하는 ‘약속의 이행’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세 차례 제출한 국가보고서의 수준이 이를 말해준다. 유보조항의 철회는 물론, 2003년에 유엔으로부터 권고 받은 내용의 처리도 머뭇거리고 있는 사항이 많다.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의 이행과 정부의 아동권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제안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이행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NAP)을 수립하는데 기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2002년에 아동이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2003년에는 학대,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통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 종합대책을 2004년에는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빈곤아동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청소년정책의 종합적인 국가기본계획인 청소년 육성기본계획을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4) 예컨대, 아동의 체벌 관련, 원칙적 금지이나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함. 또한 아동의 표현의 자유 관련,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 아동권리협약 내용이 직접 규정되지 못함.

II.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⁵⁾에 따른 한국의 아동권리 이행방안 모색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한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위원회는 한국이 취한 후속조치로서 개정된 법안⁶⁾과 조약의 비준⁷⁾ 그리고 제도적, 정책적 조치⁸⁾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우려 및 권고사항의 일부가 불충분하게 다뤄지거나 전혀 다뤄지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권고사항,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의 설립, 차별의 전면적인 금지, 그리고 아동이 겪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에 나타난 조항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영역을 8개 영역으로 나누었고, 각 영역을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8개 영역은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교육, 기초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이다.

한국은 제1차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때부터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결정한 보고서 양식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3,4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은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아동의 정의 영역을 제외한 7개 영역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이행실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5) 본장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문을 참고하였다. 본 권고문은 보건복지부가 번역하여 각기관에 배포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6) (a) 2011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 (b) 2011년 9월 개정된 민법, (c) 2011년 3월 개정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d)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e) 2010년 3월 개정된 가사소송법, (f)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g) 201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h) 2011년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7) (a) 2008년 12월 11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b) 2006년 10월 18일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8) (a) 2010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 일반 이행 조치

1) 유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9조 3항에 근거한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대한 유보를 2008년 10월 철회한 것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21조 (a)항의 입양허가제에 대한 유보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이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40조 2항 (b)상소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유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하였다. 2009년 입양관련법률이 대대적을 검토되어 입양과정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의 의무를 성문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협약의 제40조 2항과 관련하여 유보조치된 상소권 보장에 대하여 한국은 분단상황이라는 특수성과 국가비상사태시의 혼란야기 문제로 인해 유보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정을 통보하였다(외교통상부, 2008). 이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유보를 철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2) 입법

위원회는 정부가 협약의 전반적인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가 불충분하고 또한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009년에 개정된 한국의 민법 제909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은 미성년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아동의 의사표명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때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는 방식이나 의견청취 대상 연령의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가사소송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미성년인 아동의 의사를 청취연령으로 1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청취에 대해서는 무시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한편, 위원회는 한정된 예외상황 이외의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임신한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을 안전하지 않은 불법낙태 및 /또는 학업중단 강요 및/또는 아이 입양 강요 등의 위험에 노출시켜 임신한 청소년이 처한 난국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는 태아의 생존권 보장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3) 조정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조정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다음을 권고하였다.

a)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하여 강화하거나, 오히려 가급적이면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관련기구를 수립하라. :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상시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무국을 갖추도록 하고 회의를 정례화하여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b)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간, 그리고 관계 국가 및 지역 단체간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하라. 이 과정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취하는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라. : 아동의 정의와 관련되어 행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개념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민법은 만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으로 규정하여 있는 등 국내외 법규상 아동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통합적이고 일관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아동의 정의를 내리고 부서간 관계조정이 필요하다.

4) 국가행동계획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관련 파트너들과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협약의 전 부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과, 이를 위해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및 감시체제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012년부터 국가보고서 작성예정인 2018년 까지의 장기 행동계획서를 수립하여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가면서 모니터링 단계를 거쳐 한국의 협약이행의 미비점들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NAP(National Action Plan-NAP) 수립은 한국이 아동권리가 보호되고 존중되며 충족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살기좋은 세상” 이라 명명된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문서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5의 32항에서는 전략은 단순히 좋은 의도의 나열에 그쳐서는 안되며, 국가전체의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과정에 대한 기술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5) 독립모니터링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명확한 임무권한을 갖도록 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옴부즈퍼슨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협약위반을

감시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적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2호(2002)의 5항에는 “성인과 아동은 유사하게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독립 국가인권기구를 필요로 하지만, 아동의 인권이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점에 대한 부가적인 정당성이 존재한다. 아동의 발달상태가 인권침해행위에 특히 취약하고, 아동의 견해는 여전히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은 투표권도 없고, 인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에 있어서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하지도 못하며 아동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그들의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찾기 위해 사법적 체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분제에 직면하며, 아동의 권리보호를 해줄 단체에의 아동의 접근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다” 라고 하였다. 6항에는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에 특별한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기반으로 국가인권기구의 발달이 최선의 접근방식이 될 것이며 그 조직 내에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전담하는 개별적인 위원이나 특별부서 혹은 아동 권리를 담당하는 국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권리 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논평2(2002)⁹⁾에서는 아동을 위한 독립 인권기구의 설립과 기능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독립인권기구로 하여금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감독의무를 국가인권기구에 위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6) 자원의 할당

한국이 OECD국가 중에서 아동을 위한 예산 할당이 하위에 머물고 있으므로 아동 예산규모를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아동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고 지역당국 및 지리적 위치에 따른 아동간의 격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으로 재원배정을 평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직접적인 아동참여가 어려운실정이므로 간접적인 설문지등의 조사를 통해서라도 아동이 예산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참여권을 존중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5의 52항에서 “아동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할당된 국가 및 기타 예산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은 이상, 어떠한 국가도 동 협약 제 4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국이 ‘가용자원의 ...최대한으로’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고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9) 아동권리위원회 제 31차 회기 일반논평 2. 아동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 참조.

최우선적으로 결하여 경제적, 사회적 계획, 의사결정 및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소외 집단의 아동이나 불리한 집단의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이 경제 정책 또는 재정적 침체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7) 자료수집

위원회는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에서 한국 정부의 자료수집방법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협약의 범주에 포함되는 분야별로 자료가 나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5: 48항에는 아동권리실현에 있어 차별이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류된, 아동에 대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은 이행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본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정보수집이 18세에 이르는 모든 아동기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정보수집은 관할권내에서 국가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를 통해 확보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적합한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야만 하며,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이행의 진행에 대한 완전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하였다. 아동에 대한 자료를 평가하고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에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동정책개발원과 같은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8)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교과과정에 인권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하였다. 위원회는 학교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키고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라는 것을 권고하면서 협약의 대중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하라고 권고하였다. 일반논평 1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하여 15항에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조약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아동들은 가정, 학교 혹은 사회에서 실제로 이행되는 인권의 기준을 보는 것을 통해서도 인권을 학습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18항에서는 교육의 다양한 목적을 포함하는 교과과정의 근본적인 개편과 학교 정책 및 교과서 및 기타교재, 교수법의 체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 교육행정요원 및 기타 아동교육관련자들에게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

제1차 세계 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에서는 초중등학교과정내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5)의 초점은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및 교사, 교원,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따르면 대학, 정부기관 등에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인권전문가를 배치하여 인권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건전한 국가훈련체제로 구축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9) 아동권리와 재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기업이 아동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행동계획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과 교육기관의 역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의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아동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동을 상업적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2. 일반원칙¹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원칙이행과 관련하여 정부에 통합과 적용에 미흡함을 지적하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금지, 아동최선의 이익,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등의 일반원칙이 정부의 정치적 결단, 행정체계, 사법체계, 사업개발, 복지서비스전달 등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 및 실천과정에 연계, 통합,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동관련 부처들이 산재해 있고 부서 내에서 조차 업무공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효율성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협력과 조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어렵다(민간보고서, 2010).

1) 차별금지

아동권리위원회는 2007년 12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검토되지 않고 폐기된 것과 차별의 법률적 정의가 성적 지향 및 국적에 기반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다문화, 이주노동자가정, 탈북자 가정, 난민가정 출신 아동 및 장애아동과 미혼모, 특히 청소년 미혼모가 포함되며 이들에 대하여 협약 2조에 합치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

10) 국가보고서의 목차를 기준으로 제시함

서 폐기된 차별금지법을 좀 더 살펴보고 협약에 근거한 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관련 사법, 행정 결정 및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 본 원칙이 드물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정부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적절히 통합시키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강화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한국정부가 2004년 자살예방기본계획 등을 통해 청소년과 아동자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앞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교육제도 하에서 아동의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정책과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동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심리상담가의 배치가 요망된다. 청소년상담사가 국가자격으로 배출되고 있다. 아동상담사는 한국아동학회에서 배출하고 있으나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이를 국가자격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4)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정부의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의견수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권리 위원회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자신에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 센터를 설립하여 아동권리교육전문가로 하여금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출생신고

위원회는 양부모나 정부당국 요원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 미혼모관련상황을 포함, 적절한 사법감시가 부재한 상황엿 사실상의 입양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염려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법적 지위 및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7의 25항에서는 이에 대해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하고, 무료인 보편적이고, 잘 관리되는 등록시스템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효과적인 시스템은 이동식 등록기구의 제공과 같이 가족의 상황대응하고 탄력적인 것이어야 한다. 몇몇 지역에서는 병들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이 등록될 가능성이 적음에 주목하고 모든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출생시에 등록되어야만 함을 강조한다.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계속하여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종교의 다양성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하고 식단조건과 관련된 사항등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고려하는 제도를 펼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교육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3)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아동권리위원회는 과거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여전히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도시 및 농촌지역 아동들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결과로 보인다. 즉, 학생을 성인의 관점에서 평가절하하는 태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

4) 체벌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명시적인 입법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법률, 체벌의 위험에 관한 인식제고, 아동과의 긍정적, 비폭력적 관계촉진에 관한 지속적인 대중교육과 부모교육도 필요하다. 법률개혁을 위해서는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체벌을 허용하거나 옹호하는 조항을 제거해야 한다.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체벌금지를 실행하는 기초가 된다.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있다.

5)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권리위원회는 1,2차 국가보고서 심의시마다 체벌은 아동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조치이므로 이를 금지시킬 것을 권고하였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체벌을 금지하였고(제6조), 서울시 교육청 역시체벌폐지 정책을 공식화하였다(민간보고서, 2010).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였으나 그 수가 제한적이며 재원과 인력이 불충분한 점을 우려한다. 피해자의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하여 정부의 이행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학대를 신고할 법적의무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체계를 마련한다. 피해아동과 가해아동, 가해성인을 위한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충분한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을 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아동상담전문가를 양성하여 각 기관에 배치한다.

아동학대의 재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가해부모에 대하여 학대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의무적인 상담수강, 친권의 일시적 제한과 회복, 필요시 친권의 박탈 또는 서비스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가해부모의 처벌을 위하여 형사사건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사법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가정환경상실아동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탁가정에 대해 아동권리협약의 관점에 평가하며,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대안돌봄과 아동학대 접수, 조사, 상담, 진료 및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시설에 부모의 방문을 허용하고 아동이 부모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2) 입양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5조는 아동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

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입양은 아동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가장 우선 고려한다. 청소년 미혼모의 아동이 입양될 때 미혼모의 동의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입양정보원이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규정하고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한다.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비준을 추진한다. 한국의 아동이 외국으로 불법 이동 되었을 때와 외국에서 불법으로 한국이 이동되었을 때에 양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서 아동의 의견 피력제도와 과정이 CRC의 제5조와 제12조를 준수하느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5. 기초보전 및 복지

1) 장애아동

장애아동복지 위원회를 설립하고, 장애아동전담교사 배치기준의 확대등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특수교육교사와 감독관을 증가시키고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도록 한다.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제도화한다.

2) 건강 및 보건서비스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의 지원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의료보험의 환아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방을 위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3) 정신건강

정부는 정신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건강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동기 정신건강을 위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태아기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교육내용에는 아동발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신보건서비스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여야 한다.

6. 교육, 여가, 문화 활동

교육의 목적과 협약의 이념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정의 평가와 아동권리교육의 강화등이 정책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사교육비가 높고 국가의 공교육 강화라는 제도개선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으로 아동의 여가와 놀 권리가 상당히 침해되고 있다. 아동의 놀권리가 교육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7. 특별보호조치

1) 아동노동 및 성적 착취

청소년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관계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착취항목에서 청소년의 성매매에 관한 자료와 이에 대한 문제, 예방, 지원 등에 대한 보고가 추가되어야 한다.

2)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금지한다.

3) 소년사법 운영

청소년 범죄 및 재범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 아동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년 전문법원을 설립한다.

III.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제언¹¹⁾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세우

11) 김경희(201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분석과 실현방안,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의 일부를 수정보완함.

고 단계적으로 달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모니터링 단계를 거쳐 협약이행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유보철회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 인격체이며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정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로서 국내의 모든 사법적, 제도적 과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민법을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아동의 상소권(제40조 2-b-v), 입양허가제 도입(21조 a항)을 유보하고 있다. 이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사법적, 제도적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에서 청소년 미혼모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호하고 아동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할 때, 태아의 권리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음을 한국정부는 유엔에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3.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와 아동관련 부처간의 연계성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조사권등의 아동권리실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아동관련 부처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정부는 2004년 유엔의 2차 권고에 따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2007년까지 운영하였다. 이는 2008년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기능이 축소되었다.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아동권리소위원회의 설립과 포괄적인 차별금지, 아동이 받는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는 교육정책의 제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2008년 이래 아동정책 조정위원회가 작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동과 청소년 정책이 개별부처로 이행되어 정책의 분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복구하고 강화하거나 가급적 권위와 적절한 인적자원을 갖춘 적합한 기구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라고 권고하였다(3,4차 유엔권고문). 본인은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산하에 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기관은 다양하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국무총리의 산하에 두는 것이 아동의 권리실현과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4.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립과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환영하지만 보건복지부 예산에 의해 운영되므로 독립적이지 않고 역할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속성 그리고 아동권의 특화를 위한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아동권리는 어느 한곳에서 이행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8개의 클러스터내에는 서로 상호 중복되는 곳이 있으며 독립적인 부분도 있다. 따라서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지역사회, 가정 등에 아동권리 협약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옴부즈퍼슨을 두고 아동권리 옹호관을 두며, 아동권리교육인증기관을 두어 아동권리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학교 교과과정에서 아동권리와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많이 포함할 것과 아동과 더불어 또는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 집단에게 협약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기업과 교육기관의 역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의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아동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동을 상업적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지표를 기업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5. 아동권리교육센터의 설립

아동권리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자, 사법관계자, 경찰, 부모 등의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지역사회에 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6. 헌법에 아동의 수용 및 소년전문 법원 설립

법치국가에서 정책은 법을 기초로 만들어진다. 아동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아동의 권리를 헌법상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헌법소원등을 통해 현행법의 결함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CRC(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이하CRC)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동 협약비준으로 인하여 그간 많은 법제도적 정비가 있었으며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상위법인 헌법에 없는 아동을 하위법에 적용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아동권리협약의 가입당사국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겠다고 한 국가적 약속을 가장 유효하게 실현하는 방안으로 헌법에 아동의 수용을 제안한다. 이는 아동의 법인격성(권리주체성) 및 구체적 권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아동의 지위 및 복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강한 상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단순한 법률차원을 넘어서 국가최고법인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헌법에 규정된 다른 중요한 법익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헌법적 법익이라는 점, 국회가 다른 법률처럼 쉽게 개정할 수 없는 항구적 가치가 있는 법익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는 현세대 국민과 차세대 국민 사이의 유대의 표현으로서 차세대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갖게 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보호 및 배려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 등에 대하여 및 아동 본인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다룰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거나,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국가적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7.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의 확보

국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동계획의 실천과 평가를 위한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예산의 확보와 제도의 마련이다. 아동권리의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아동권리존중의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전통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아동은 수동적이며 의존적이고 부모의 요구에 순응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을 지닌 성인들과 사회의 변화에 순응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평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갈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해서 아동권리가 침해당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아동권리존중의 사회문화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42조:당사국은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리 의무를 진다를 강조하고 있다. 일반논평 5에서 개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대부분 전통적으로, 모든 사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아동들은 권리의 주체로서 간주되

지 않았다. 따라서 제42조가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만약 아동 주변의 성인, 그들의 부모나 기타 가족 구성원, 교사 및 보호자가 동 협약의 합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권리주체로서 아동의 동등한 지위를 확인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많은 아동들에게 동협약상의 권리들은 거의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홍보를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권리교육과 홍보와 관련하여 각 시,군,구 지자체에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행동계획의 작성과 홍보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이 생각하고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눈높이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정책을 개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아동의 각 연령단계별 재정투입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정책개발도 요구되어진다.

8. 부모자격증 제도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에 대한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사건을 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것을 권고하였다. 학대와 방임을 보고하는 법적의무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국가전략을 개발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부모자격증 제도의 신설을 제안한다. 아동을 이해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부모의 태도와 가치관형성이 아동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교과과정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것과 더불어 아동발달의 이해와 부모역할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는 아동권리의 내용과 실천사항을 고등학교에는 아동발달의 이해를 대학교에는 아동발달의 이해와 부모역할을 교과목으로 포함시키는 강제규정이 필요하다. 결혼하여 부모가 되는 자에게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이를 수료한 자에게는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을 존중하는 부모는 자연히 자신을 존중하게 되고 이는 가족구성원전체의 행복한 분위기를 창출하며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9. 헤이그 협약의 비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입양에 대해 적절하고 상당한 보호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법률을 개정할 목적으로 해외 입양 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a) 헤이그 협약의 6조에 부합하도록 한국의 ‘중앙입양정보원’이 효율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과 더불어 명확한 권한을 규정할 것. 그리고 해외에 입양되어 한국어에 익숙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의 이러한 시설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입양 후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것을 포함할 것.

b) 입양 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합당한 비중이 주어지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되도록 보장할 것.

c) 자녀를 입양 보낼 때 청소년 미혼모의 필수적 동의를 보장하고 그러한 동의가 사실상 또는 실제적인 강요하에서 획득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건을 제공할 것.

d) 해외 입양의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입양이 사법적 감독과 규제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역량을 가진 명확한 권한의 중앙 당국에 의한 승인을 따르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e) 해외 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

IV. 결론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는 아동이 살기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이라는 문서를 결의하였다. 문서에서는 아동을 가장 먼저 고려하라는 대원칙을 전제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삶의 증진, 질높은 교육의 제공, 학대, 착취 및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그리고 HIV의 퇴치라는 4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UN, 2002).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아동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아동도 단순히 특별보호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 나약한 대상으로만 여기기보다는 기본 권리와 자유의 주체로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능동적인 아동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에 1차, 2차, 3, 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제

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에 대해 매번 권고안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이행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권고언급되는 사항들이 있다. 이번 3,4차 권고안에는 한국의 정부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법적, 정책적 노력을 많이 기울여 아동, 청소년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하고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고 전달 조직이 발족되는 등 가시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정부는 2007년 5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하였으며, UN아동 권리협약 등 국제적 기준, 아동권리 관련 국내 헌법,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내 현황,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27개의 과제¹²⁾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2012년부터 5개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기적 관점에서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행동을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 한국이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에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이행사항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연구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리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 둘째, 유보철회
- 셋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와 아동관련 부처간의 연계
- 넷째,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
- 다섯째, 아동권리교육센터의 설립
- 여섯째, 헌법에 아동의 수용 및 소년전문법원 설립
- 일곱째,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의 확보
- 여덟째, 부모자격증 제도의 설치
- 아홉째, 헤이그 협약의 비준

12) 아동권리와 직접 관련된 과제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제도 운영, 성매매 피해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및 운영 확충, 성매매 피해 청소년 대상 치료·재활교육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저소득층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강화,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이다.

* 참고문헌

- 강민지(2010).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나타난 아동권리내용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10). 헌법의 아동수용에 관한 토론.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경희(2011).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 대한민국정부(1999).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 대한민국정부(2008).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 국가보고서.
- 민진홍(2011). 아동인권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10).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 이양희(200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활동과 아동권리쟁점. 한국아동권리학회 2004 추계학술대회자료집. 41-55.
- 이재연(1997). 각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실천상황. 아동권리연구. 1(2), 5-20.
- 이재연(2007). 한국의 아동권리: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한국아동권리학회.
- 황성기(2009). 아동의 권리의 헌법 수용의 문제,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권리의 헌법 수용의 문제 세미나 발제.
- 헌법연구자문의위원회.(2009). 헌법연구자문의위원회 결과보고서.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1991).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Initial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UN Doc. CRC/C/5(1991). para1(a), of the Convention.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1996).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bations: Republic of Korea. CRC/C/15/Add.51, 13 Feb 1996.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bations: Republic of Korea. CRC/C/15/Add.197, 18 March 2003.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4). Concluding Observation: EL Salvador's Second periodic Report, CRC/C15/Add.232 4 June 2004.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7). General Comment, General CRC/C/GC/10. 2007.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11).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44 of the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KOR/CO/3-4 General 6
October 2011.

Treasury. H.M,(2008). Ending Child Poverty; Every-body's Business. PUP.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위한 제안

폭력, 착취, 체벌, 학대 및 방임 등 아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중심으로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제 3, 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에 근거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에는 아동폭력 및 아동학대 방임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언급하고 있음
 - A. 일반이행조치: 7번 항목
 - B. 시민권과 자유: 42-43번 항목(체벌), 44-46번 항목(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 D.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47-48번 항목(가정환경상실아동)
 - F.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63번 항목(직업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교육)
 - G. 특별보호조치: 70-71번 항목(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2-73번 항목(성적착취), 82-83번 항목(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 전체 8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이번 권고사항 중에서 15개의 항목이 아동에 대한 폭력, 착취, 체벌, 학대 및 방임 등 아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에 할애되어 있음

1. 체벌

- 특히 학교 및 가정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기존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A. 일반이행조치

위원회의 기존 권고사항

7.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권고사항,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의 설립,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 그리고 아동이 겪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B.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19, 37(a) 조)

체 별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돌봄환경에서 체벌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과거 우려사항(CRC/C/15/Add.197, para. 38)을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라. 그리고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
- c)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 이에 학교 등의 제도적 공간에서 성행하고 있는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체벌의 허용근거가 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정하여야 한다.
- 학교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수 있도록 체벌금지를 위한 포괄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 내 체벌금지에 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다.
- 체벌을 당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담기관을 이용해 문제해결의 방법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이와 더불어 체벌의 문제는 제도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문화 등 일반적인 의식의 변화를 수반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학교 등 제도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체벌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벌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증적인 근거로 삼는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같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약의 제정 및 홍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체벌을 아동학대의 한 범주로 명문화하는 대중교육 캠페인을 학교와 가정에서 실시

하여 체벌의 부정적인 결과를 널리 알려야 한다.

-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효과적인 훈육방안을 개발하여 가정과 학교에 교사 및 학부모 교육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2. 학대 및 방임 등 아동에 대한 폭력

-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피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유엔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음

B.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19, 37(a) 조)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44.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 육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생이 증가하고있고, 이러한 학대를 신고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내 괴롭힘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해왔다는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을 환영하나, 그 수가 제한적이며 재원과 인력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학대및/또는 방임 피해자의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45.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자의 신원 및 안전을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교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하라.
 - b) 지역 시설을 포함,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학대 및 또는 방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을 제공하는 등 이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하라.
 - c)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 (2011)를 고려하라.
46. 유엔사무총장의 아동폭력보고서(A/61/299)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독려한다.
 - a)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의 이행을 비롯, 성별에 특히 유념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우선시하라.

- b) 특히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강조한 다음의 사항을 비롯하여,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라.
 - (i)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의 개발
 - (ii)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의 도입
 - (iii) 자료수집, 분석, 보급 체계통합 및 아동폭력관련 연구의제 통합
- c)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관련 기구,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마약범죄 사무소(UNODC) 및 비정부기관 파트너와 협력하고 이들 기구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F.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협약 28, 29, 31조)

직업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교육

63.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e) 학생간 괴롭힘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 운동장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한다.

G.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8, 39, 40, 37(b)-(d) 및 32-36조)

성적착취

72. 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008년 개정안을 환영한다. 동 개정안은 아동 성 착취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에 임시 및 긴급 생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성범죄 피해아동의 상담, 보호, 치료 및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한다.

- a) 아동 성폭력 급증과높은 음란물 소비율
- b) 아동학대에 대한 낮은 기소율
- c) 남아 또는 남성 대상 및 외국어로 진행되는 피해자 재활 서비스 부족
- d) 아동학대 범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의 삭감

73.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협약35조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2조 및 3조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대한민국에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a)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 b)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 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라.
- c)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수준의 처벌이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라.
- d) 형사책임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 e)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신매매 및 성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며 이러한 지원활동이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인신매매

74. 위원회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채택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으나, 다수의 여성 및 아동이 성 착취와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한국을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신매매법의 기소율 및 유죄율이 낮다는 사실에 특히 우려를 표시한다.

7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76.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이 의정서 2조와 3조에 명시된 범죄 모두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반복한다(CRC/C/OPSC/KOR/CO/1, para.30). 또한, 위원회는 앞서(para.35) 언급된 제3자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방지할 조치의 부재가 아동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선택의정서 3조 1항과 관련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외국에서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의 확립을 위

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대한민국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CRC/C/OPSC/KOR/CO/1, para. 38).

77.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반복한다.

- a)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선택의정서 2조와 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 b) 선택의정서 4조 2항에 의거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라(CRC/C/OPSC/KOR/CO/1, para. 39).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8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6세 이하 아동피해자와 목격자가 영상물 녹화로 진술을 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심문 및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부적절하다.

- a) 관계자들이 영상물 녹화에 능숙하지 않아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b) 법원이 영상 진술 자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 c) 피해자와 목격자가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환경에서 반대심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 d)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된다.
- e) 피해자 프라이버시를 위한 보호 장치가 불충분하다.
- f) 경찰관과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 g) 의료진 및 법집행관이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83. 위원회는 아동 친화적인 절차 규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피해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이 더 존중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적절한 법 조항과 규정을 통해 모든 피해아동과 범죄목격자 아동, 즉,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 등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와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아동범죄피해자와 증인관련문제에서의 유엔 사법지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의 부록)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피해대아동의 보호를 제 3, 4차 통합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취해진 대한민국의 노력은 다음과 같음
 - 2003년 이후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이 국내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제·개정하여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동인권위원회의 1차 권고사항의 이행)
 - 최근 개정된 주요 아동관련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확대, 가정위탁개념의 도입, 가정위탁센터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 확대)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정보등록열람제도 신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열람제도, 취업제한제도강화 및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범죄로 변경)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담검사, 경찰관지정·운영, 진술녹화제도도입, 조사시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침 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국적 통일된 번호로 긴급전화 설치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2009, 긴급전화센터 설치 및 종사자 자격기준,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9,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확대 등)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0,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에 주거지역 제한 추가 등)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 가해자가 친권자일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성폭력 방지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명시 등)
 -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위해 2004년과 2007년에 전국적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아동이 학대되고 방임되는 것 방지 목적으로 아동안전종합대책 수립하였다. (2003)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확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여 전국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6)
 - 법집행공무원과 검사 등에게 아동친화적 교육과정 운영하는 등 조사-수사 및 기소절

차에서 아동친화적 방식 도입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또한 아동을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으로서 ‘성매매방지대책’, ‘청소년유해환경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아동관련 사건에 대한 아동친화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담검사·경찰관제도, 진술녹화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 성적착취피해를 입은 아동은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 ONE-STOP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보호·치료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이상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 몇 가지 지점에서 추가적인 노력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보다는 신고접수와 상담 프로그램에 정책이 집중되어 있어서 정책의 집행이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아동학대의 경우 2차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해자라 할지라도 학대를 가한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보호권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관련 법제 분석 결과, 아동학대 관련 필요 입법조치들이 이루어졌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에서 제시한 취약계층 아동과 장애아동, 난민 아동, 소수자 아동 등과 같이 학대에 쉽게 노출되고 보호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 아동들을 위한 구체적인 학대예방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동학대 관련 법 집행에 대한 관련인력의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이나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 37조 1항)가 있다. 우리 헌법은 이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형법 및 형사소송법도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법률상조치가실효를거두기위해서는관련법을집행하는담당자의의식적개선이우선되어야한다.
 -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법이나 제도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이나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것을 집행과정에서 담당자가 법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와 피학대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명문화하여야 한다.
 - 첫째, 현행 아동복지법의 학대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대한 규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학대 치료의 비용에 대한 예산확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을 법제화하고, 친권개입으로 인한 피학대 아동보호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 둘째, 피해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한다. 아동학대 사례를 접수, 감독,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친화적인 방법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야 한다. 또한, 이상의 법령만으로 아동학대방임사례에 관여하게 되는 다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므로(보건복지부, 200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법경찰, 검찰, 의학전문가들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교육받도록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위탁가정 등 대안돌봄 제도

- 유엔위원회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위탁가정 등의 대안돌봄을 제공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추가시설의 건립 등 양적 팽창과 행정운영상의 발전 등 외형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는 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음
- 결국, 아동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담당자의 전문성 및 훈련의 제공 등 질적 평가 및 그에 따른 개선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D. 가정환경과대안돌봄 (협약 5, 18(1-2), 9-11, 19-21, 25, 27(4) 및 39조)

가정환경상실아동

47. 위원회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족과 같은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과 이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건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대안돌봄시설에 대한 평가는 오직 행정운영만을 평가하며, 보육, 보육담당자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훈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하며 지적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러한 시설 내 학대 및 방임사건을 다루기 위한 진정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하며,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동을 위한 추적제도의 부재에도 우려를 표한다.
48.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서비스의 질,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등에 대해 받는 정기적인 교육, 공립 및 사립 대안돌봄기관 내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유형을 협약 25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 b)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학대 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 c) 대안돌봄 환경 내 아동이 부모를 찾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한다.
- d) 2009년 11월 20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 대안 돌봄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하라.

– 대한민국은 그 동안 가정위탁보호 등 대안돌봄의 제도적, 법적 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가정위탁보호는 아동복지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고 있다.
- 특히 2005년 7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가정위탁의 정의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 그리고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동법은 가정위탁 보호된 아동을 위한 양육비용보조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그리고 운영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였다.
 - 동법 제31조(비용보조) 제2항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보조)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보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 이 외에 문제가 되었던 아동보호의 신청(동법 시행령 제5조), 아동의 귀가조치(동법 시행령 제8조), 사후지도(동법 시행령 제9조), 일시위탁보호의 의뢰 등 그 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시되어 왔던 사업들이 이제는 법적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 가정환경상실아동을 위한 위탁가정 등 대안돌봄 제도에 대한 유엔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지점들이 고려되어야 함

- 2005년 7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가정위탁의 정의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 그리고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지침

이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위한 전담 전문인력이나 재정지원이 없어서 실제로 운영을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가정위탁보호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 많이 제정되었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CRC의 무차별의 원칙, 아동최선의 이익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발달보장원칙, 아동의사의 존중원칙을 보장하기에는 법적 구속력도 실제적인 서비스 내용도 턱 없이 부족하다.
- 이에 아동최선의 이익을 위한 가정위탁우선보호조치, 다양한 유형의 위탁가정 설치 및 운영, 아동과의 재결합 의사가 없는 부모에 대한 조치, 아동의 안전이 불확실한 가정으로의 복귀에 대한 대책, 필요한 경우 친권행사의 부분적 제한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친권상실청구 책임 의무화, 친부모와 후견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규정 등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보장의 원칙 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아동노동 등 기타 경제적 착취

- 유엔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함
- 그러나 근로아동의 수적 증가, 근로기준법의 위반, 근로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의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G.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8, 39, 40, 37(b)-(d) 및 32-36조)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착취방지를 위한 2005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 수립을 환영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 a) 근로아동의 수 증가
- b) 아동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15세가 넘는 아동을 야간 근무시키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주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관련 기준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 c)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과 같은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 불충분
- d) 노동 감독불충분
- e) 만연한 언어적, 성적 학대 및 폭력발생으로 인한 근로아동 문제 악화

- f) 연예인이나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의 수 증가
71.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 b) 야간근무금지의 효과적인 시행과 최저임금 지급 등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라.
 - c)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하라.
 - d)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하라.
 - e)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묻고 재발을 돕는 효과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

-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수적으로 소수에 해당하지만 아동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착취와 학대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아동 출연 연예인에 대한 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청소년 연예인 근로보호 기준 법안의 마련, 합리적인 기획사의 수수료 및 출연료 산정의 공정거래안의 제시, 연예기획사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규정 마련 등 아동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참고문헌

- 김승권. 2007.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보건복지포럼』 128, 21-36.
- 우병창. 2011.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우리법의 정비. 『안암 법학』 34, 477-522.
- 민진홍. 2011.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허남순 · 이혜원. 2006.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국내 가정위탁보호의 현황분석. 『한국아동복지학』 22, 95-126.

토 론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문

이은주 교수(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의 정부 이행방안을 위한 제언

김형모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문

전영순 (월드비전 국내북한사업본부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

전미선 부장(굿네이버스 국내사업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의 정부 이행방안을 위한 방향성 제시’ 발제문에 대한 토론

김영지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

유숙경 소장(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문

이 은 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알리고 권고안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2012년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2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정부의 아동권리 정책 수립에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고서 심의회기 전 실무자회의를 위한 정보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였고, 제 58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 3,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회기에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작성 과정에도 참여하였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정보노트와 의견서에서 지적한 모든 이슈에 대한 권고사항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우리나라 아동복지 현 상황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김경희 교수님과 김진석 교수님 두 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발제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희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제언에 대해 몇 가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NAP에 대해서 현재 1기 평가도 상당히 늦게 진행이 되어서 2기 NAP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기 NAP 평가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NAP 권고안(국제협약과 유엔권고안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권고사항이 NAP 수립과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기 NAP수립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1기 NAP가 수립 및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권이 증진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현재 복지부에서 헤이그 국제입양 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입양허가제는 유보 철회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3. 아동권리교육 인증기관과 아동권리교육센터의 설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동권리교육 강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기관에서 아동권리교육을 담당했을 경우 부정적 측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 담당 부서 등 국가에서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헌법에 ‘아동’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학계 등 아동 및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서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규약을 법원판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 판례를 중심으로 사법부에 활용가능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판결과정에서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규약이 사용된다면 아동권리 보호와 존중이 더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2007년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지출 수준을 진단해 보면,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평균 GDP의 1.426%를 지출하였는데, 한국은 GDP의 0.458%를 지출하여 이 국가군 중 지출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 아동복지예산과 아동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 빈곤율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아동가족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아동 빈곤율이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대상별 1인당 복지예산을 비교해보면, 2011년 노인 85만원, 장애인 27만원, 아동 2만원으로 나타나 사회복지 주요 대상인 노인과 장애인과 비교하여 아동예산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6. 부모교육의 확대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부모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가임기 여성들의 결혼기피 현상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만약 부모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면 결혼기피와 출산율 저하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보다는 아동양육부모들이 아동양육 과정에서 양육상담이나 양육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영아기 부모들은 아동 예방접종을 받는 보건소나 소아청소년병원에서, 유아기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기 부모들은 학교 또는 아동보호센터 등에서 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양육정보나 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혼모 가정은 부모자격증 제도가 사회적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위험가능성이 있습니다.

7. 헤이그 국제입양 협약 가입과 비준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11월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추진되어서 입양아동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양허가제 도입에 대한 유보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진석 교수님의 발제문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아동권리위원회 심의회기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를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체벌에 대해서 직접체벌 금지이후 반성문 쓰기와 같은 간접체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의 체벌을 인정하고 학칙에 정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3월 이러한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형태의 간접적인 벌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속적으로 대안적인 훈육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 재학대 신고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대를 한번 경험하는 것도 아동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재학대 신고 건수가 503건이라는 것은 학대가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학대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학대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재학대 받은 아동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위탁가정 유형 중에서 친인척 위탁가정과 일반 위탁가정의 수는 200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조손가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아동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친인척 위탁가정과 일반 위탁가정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처럼 치료적 위탁가정도 만들어서 학대받은 아동들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4. 아동에 대한 착취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적착취입니다.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센터를 마련하였지만 형사절차상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나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 구축,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 점검과 평가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또한 아동연예인의 학습권과 노동권 등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 제정이 필요하고, 학생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국가보고서의 8개분야와 선택의정서에 아동권리와 관련된 내용은 더 많지만 발제문을 기초로 하여 앞에 제시된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2011년 권고사항 내용은 지난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기된 권고사항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아동복지 관련 법과 정책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도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가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아동관련 법과 정책을 개선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해 나가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민간기관은 정부의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해서 권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촉구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의 정부 이행방안을 위한 제언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토론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의 정부 이행방안을 위한 김경희 교수와 김진석 교수의 제언들에 덧붙여 몇 가지 추가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아동관련 부처의 통합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1조에서 “아동이라 함은 해당 아동법규에 의하여 미리 성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3,4차 유엔권고문에서는 2008년 이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작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동과 청소년 정책이 개별부처로 이해되어 정책의 분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하고 강화하거나 가급적 권위와 적절한 인적자원을 갖춘 적합한 기구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라고 권고하였다.

본 발표자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이 아동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청소년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와 아동권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정책, 청소년활동진흥, 청소년자립지원, 청소년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문을 이행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업무가 보건복지부를 통합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법률들을 아동관련 법률로 통합하고,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아동정책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아동 예산의 증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는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아동을 위한 예산 할당이 하위에 머물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분야별 세출 예산은 <표 1>과 같다. 2011년 보건복지부 총 예산 20,940,663백만원 중 아동·장애인 등의 예산은 1,046,026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5.1%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노인의 예산이 3,714,510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1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아동·장애인 예산 중 아동 관련 예산은 방과후돌봄서비스 977억원,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372억원, 아동안전지킴이 72억원, 가정입양지원 113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보조 73억원으로 1,60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로 이관된 아동 관련 예산도 존재하지만,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에서도 아동 관련 예산은 노인이나 장애인 관련 예산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아동 관련하여 사용되는 예산과 사용되는 항목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아동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표 1〉 2011년 보건복지부 분야별 세출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총 계 (A+B)	19,816,635	20,940,663	1,124,028	5.7
□ 총 지출(A)	19,473,580	20,692,179	1,218,599	6.3
○ 사회복지	14,275,740	15,315,372	1,039,632	7.3
- 기초생활보장	7,286,456	7,516,784	230,328	3.2
- 아동·장애인 등	880,784	1,046,026	165,242	18.8
- 공적연금	395	387	△8	△2.0
- 보육 및 저출산	2,159,819	2,510,736	350,917	16.2
- 노인	3,500,668	3,714,510	213,842	6.1
- 사회복지일반	447,618	526,929	79,311	17.7
○ 보 건	5,197,840	5,376,807	178,967	3.4
- 보건의료	878,289	729,665	△148,624	△16.9
- 건강보험	4,319,551	4,647,142	327,591	7.6
□ 내부거래(B)	343,055	248,484	△94,571	△27.6
○ 회계,계정간거래	115,211	42,810	△72,401	△62.8
○ 기금전출금	227,844	205,674	△22,170	△9.7
※ 별도 통계				
- 인 건 비	253,826	261,524	7,698	3.0
- 기본경비	33,184	33,650	466	1.4

3. 대안양육체계의 확립

1) 가정위탁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정을 위탁가정으로 대체하고, 대안양육 확대 및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대로 소년소녀가정을 위탁가정으로 대체하여 위탁가정보호 아동의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세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위탁가정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양육 능력이나 환경에 대한 적절한 사정 과정 없이 무조건 대리양육 위탁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친인척 위탁 및 일반위탁 가정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친인척위탁가정 및 일반위탁가정의 아동 수는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양육체계로서 일반위탁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정위탁 후 사후관리로서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상담 등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8개소에 불과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표 2> 연도별 가정위탁 유형별 아동 현황

연도	계	대리양육 위탁아동	친인척 위탁아동	일반 위탁아동
2003	7,565	3,458	3,541	566
2004	10,198	5,196	4,133	869
2005	12,562	7,552	4,007	1,003
2006	14,465	9,062	4,160	1,243
2007	16,200	10,112	4,850	1,238
2008	16,454	10,709	4,519	1,226
2009	16,608	10,947	4,503	1,158
2010	16,359	10,865	4,371	1,123

*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년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2) 입양

2007년 이후 국내입양 아동수가 국외입양을 앞서고 있지만, 이는 국외입양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정책(해외입양쿼터제 등)의 결과로서 국내입양 아동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대부분 국외입양에 의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995~2008년까지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이 전체 국내입양아동의 0.5%(362명)인데 반해 국외입양은 전체 국외입양의 24.0%(38,613명)이다.

아울러 입양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입양기관별로 관리하는 정보가 기관 간 상호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입양희망 부모와 입양아동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입양아동이 자신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친부모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2009년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하고 2011년 6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운영을 위한 조직과 예산 등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역할 수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등을 포함해 입양을 요하는 아동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중앙입양정보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마련하고, 입양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 3> 연도별 국내·국외 입양아동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내	1,564	1,641	1,461	1,332	1,388	1,306	1,314	1,462
국외	2,287	2,258	2,101	1,899	1,264	1,250	1,125	1,013
계	3,851	3,899	3,562	3,231	2,652	2,566	2,439	2,475
국내입양비율	40.6%	42.1%	41.0%	41.2%	52.3%	50.9%	53.9%	59.1%

* 자료: 보건복지부(2011), 국내·국외 입양 현황. 보건복지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문

전 영 순

(월드비전 국내북한사업본부장)

1991년 한국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1991년 12월 20일에 회원국이 되었는데 만20년이 지난 2011년 12월 20일 오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방대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신 김정희 교수님과 김진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덧붙여 몇 가지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를 미덕으로 존중하는 전통적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연령차별적 생활의식이 굳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남녀차별을 남녀차이로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유유서를 연령차별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아동권리에 대한 우리사회의 낮은 인식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유교문화적 영향으로 인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편파적인 해석을 갖게 되어 아동의 권리강화가 성인의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신념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유보조항을 이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해 1차부터 현재 3,4차 권고사항이 이해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도 이 이유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아동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미성숙하고 연약하며 통제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인권의 일부로 간주되는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그리고 문화권을 아동을 위한 이 협약 속에 포함시켰고 이 협약으로 인해 회원국들은 아동권리의 보장을 단순한 도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법적 의

무로서 이행할 책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등과 함께 공공영역에서의 참여권으로까지 확장하였고 아동의 의견존중을 일반원칙 중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등을 명시하는 등 아동을 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아동의 시민적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아동을 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차별이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조차 훈육과 혼동되어 수용되거나 권장되고 있으며, 학생인권이 교권과 대립된다는 왜곡된 담론이 만연해 있습니다. 차별 금지나 두발 자율화에 대한 논쟁은 2000년 10월 청소년 연대를 통해 두발제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중,고교 두발자유화 논란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토론회를 통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학교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지시하고 또 "각급 학교는 이번 기회에 학생회 등 학생 자치회를 통한 학생들의 충분한 토론과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 스스로 규정을 제정해 준수하라"고 강조했으나(한국일보, 2000. 10. 4), 2011년 현재에도 여전히 차별과 두발자유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의 대안으로 그린마일리지라는 일종의 상벌점제도가 나왔으나 이 또한 통제방식의 방법이 바뀌었을 뿐, 아동을 소통과 자치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는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더욱이 차별이나 두발자유는 학생인권의 핵심의 아닌 시작에 불과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 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한 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참여권이 전면화 되고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삼는 학교시스템의 전면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참여의 권리는 아동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참여 자체가 목적이며, 아동은 본래의 능동적인 참여활동, 바깥세상에서의 활동을 통해 인간적으로 성장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육방법론으로서의 학생 참여’를 뛰어 넘어 아동권리협약의 권고처럼 학생의 권리로서 학생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배우게 하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아동의 참여권은 우리 교육시스템의 참고사항이 아닌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아동참여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에서의 한 시민으로서의 참여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참여 활동에 지역의 청

소년단체나 시민사회단체, NGO 등이 함께 협력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이 참여와 자치를 배우고, 공동체를 배움으로써 협력과 소통이 있는 새로운 시민사회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현행 아동복지 관련법은 아동을 보호의 개체로 파악하고 있을 뿐 자신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위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에 대한 규정조차도 선언적 의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적극적인 의미의 휴식, 여가 보장권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동의 의사존중이 새롭게 규정되었으나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대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대리보호 중심의 선별적이며 치료적인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동을 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이 아닐까합니다. 시민은 통제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입니다. 이러한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부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계속 아동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 부대를 가지고 수리하고 보완해 간들 새 포도주를 담은 현 부대는 쏟아지고 말 것입니다. 아동을 우리의 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마땅히 해 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참고문헌

배이상현, 학생과 교사, 그 모두를 살리는 학교재구조화의 원리 학생인권과 참여.
이혜원,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아동복지법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2001. 3.
김승훈,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인도법논총 제29호.
월드비전 60주년 아동복지포럼자료집 ;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 : 아동의 안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2010. 11.
“중고생 두발 학교 자율로,” 〈한국일보〉, 2000년 10월 4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

전 미 선

(굿네이버스 국내사업부장)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인권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 아동권리를 제도 내 포함시키려는 시도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아동의 참여를 비롯한 아동권리 전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마련과 함께 이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을 갖추는 것이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3,4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현재까지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토론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사회적 여건과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7개 영역으로 제시된 권고안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정부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제안에 대해 동의하며 특히 협약 이행을 위한 통합적인 국가행동계획수립과 부처간의 조정기능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 현재 아동, 청소년의 국내법 분류에 따른 관리 부처 분리로 인한 대상자의 중복, 역할의 모호함이 우려되므로 원활한 정책 수립과 수행을 위해 조정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협약의 홍보와 교육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협약 비준 이후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 인식 부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권고되고 있다.

굿네이버스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아동과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와 아동권리를 연결 짓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학교의 외부 교육에 대한 폐쇄성으로 인해 교육 접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권리의 주체인 아동에 대한

아동권리교육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받는 자체가 아동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체계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교육이 미흡한 현 실정에서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권리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과과정 내 아동권리교육이 포함되어 필수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할 것이다.

7차, 9차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도덕과 사회 교과 내 인권교육 내용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아동이 보편적인 인권뿐 아니라 아동이라는 시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아동권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현재의 권리를 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과과정 내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권리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사 직무연수 등을 활용하여 교사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1,2차 세계 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지향하는 바와 같이, 가정 및 교육 환경, 사법체계, 정책 등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폭력, 착취, 차별 및 학대, 방임 등 아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 중심으로 권고 내용과 이행을 위한 여러 제안이 있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개입으로 2차 예방을 위한 노력에 대한 제기는 아동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논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에 의한 학대 발생율이 매우 높고 2010년에는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사례가 전체의 83.2%에 이르고 있다.

2000년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아동보호시스템이 마련되고 체계화되는 시기를 거쳤다면, 이제는 원가정으로 복귀되는 아동의 권리가 가정 내에서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족지원 서비스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대행위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상담 및 치료서비스부터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성행교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법체계 내에서는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학대 성향 개선을 위한 실질적

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자 교정을 위한 상담·수강 명령 등 의무조항을 마련하여 재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개정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를 개입하는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승인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 및 조사자들이 위협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아동학대 신고 사례 수 대비 사례 개입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이나 시설의 수는 부족하고 민간단체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법적 권한이나 구속력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개입 전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원은 신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학대행위자가 개입 조치에 반대할 경우 강제력을 가지고 집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보호조치 처분을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체계 내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 결정하도록 하여 학대행위자가 법원의 판결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개입 과정 중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으로 아동 등 대상자에게 시기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업무 특성상 상담원이 겪게 되는 신체상해와 심리적 장애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긍정적인 훈육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 교육청에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며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이미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양질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약 비준 이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협약 이행 논의와 실천 노력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지 2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본 토론을 통해 아동권리 측면에서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대해 다시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거듭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주체와 많은 장을 통해 이러한 논의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의 정부 이행방안을 위한 방향성 제시 발제문에 대한 토론

김 영 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월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심의 결과 발표 후, 권고사항 이행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연내 마련된 것은 우리사회의 아동권리 관심 수준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반가운 일이라 생각된다.

첫 번째 발제문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을 분석하여 7개 영역별로 이행 방향을 제시하고 9가지 정책과제를 제언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문은 폭력, 착취, 체벌, 학대와 방임 등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권고안 내용을 분석하고 이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방대한 내용을 검토하느라 매우 수고가 컸으리라 생각된다. 발제문은 향후 정부를 비롯한 관계집단들이 권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해야 할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과제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방향을 잡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본 토론은 몇 가지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문이 양적으로도 확대되고 내용 또한 구체화되고 있어 우리사회의 인권신장 노력도 보다 넓어지고(포괄성) 깊어질(전문성)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996년 1차 권고문 32para. → 2002년 2차 권고문 63para. → 2011년 3·4차 권고문 88para)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인권이슈와 그 동안 관심을 두지 못한 누락된 인권영역을 찾고 기존의 인권신장 과제 해결 전략도 진일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권고안에서는 그 동안 아동권리 논의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들이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반이행조치 중 ‘국제협력(para. 24-25)’¹³⁾과 ‘아동권리와 기업(para. 28-29)’¹⁴⁾에 대한 권고가 새로 등장했고, ‘청소년미

13) 국제원조 기여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개방도상국과 체결하는 국제협력협약에서 아동권리 실현을 중요 우선순위가 되도록 할 것을 권고

14) 기업의 반인권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사회적임성 모델 도입 촉진, 기업

혼모(para. 10-11, 28-29)¹⁵⁾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것이 느껴진다. 새로운 이슈의 한국적 의의와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권리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주제별로 기존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일반이행조치 부분(para. 7)에서는 2차 심의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소위원회 설립, 체벌의 전면 금지, 아동이 겪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검토 등 세 가지를 별도로 들고 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쟁적 입시위주 교육의 비인권적 문제는 아동 권리 신장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교육정책의 아동권리 기반 접근을 위해 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교육 부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필요가 있다.

넷째, 제3·4차 국가보고서 제출과 함께 민간단체 보고서와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다. 이번 심의의견을 이와 비교해 볼 때, 민간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안적 보고서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 내지는 지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안보고서가 제시한 국가아동권리정책의 문제점과 미비점, 개선방향 등이 의미있는 참고의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 권리 관련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무성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아동권리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견해 존중을 위한 권고사항의 하나로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para. 35(c))’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제2차 권고문(para. 35(c))에서도 제안된 사항이나 영향 검토가 설문조사 이상의 수준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는 것 같다. 아동 참여권 수준과 성과 검토를 위한 객관적 방법과 지표 개발 및 적용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여섯째, 아동과 청소년정책 이원화, 아동관련 모든 부처간의 연계·협력 및 업무조정 미흡의 문제는 아동권리정책 시너지 효과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인만큼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이 아동권리에 끼치는 영향 평가 실시. 강제 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 방지. 기업이 해외 사업 참여시 아동권리 존중 조치를 취할 것.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 실시

3) 일반이행 영역에서는(para. 10-11) 낙태관련 법률이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검토할 것을, 일반원칙 중 비차별 부분에서는(para. 28-29)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

논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처 조직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더라도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나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와 같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아동권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권한과 실질적인 역할기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일곱째, '독립적 모니터링'과 관련한 권고는 매우 중요하다.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와 옴부즈퍼슨의 권한과 지위, 기능, 자원의 부족문제는 민간부문에서 오랫동안 지적해 온 사안으로,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관계자의 인식확대 노력이 급선무이다.

여덟째, 유엔 권고 이행 노력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발제자도 지적했듯이 협약 권고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이라 하겠다(para. 14-15). 아동권리정책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아동권리증진기본계획(가칭)과 같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범부처적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구체적인 타임스케줄과 예산과 자원할당 방안을 세우고 과제별 담당부처/부서를 명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계획을 담도록 한다. 이 과정에는 정책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아동·청소년, 학부모와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함께 해야 할 것이다(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일은 2017년 6월 19일임). 더불어 현재 수립 중인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같이 기존의 아동·청소년관련 국가행동계획에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권고안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

유 숙 경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

부 록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 · 4 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8차 회기

2011년 9월 19일~10월 7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사

최종견해 : 대한민국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1년 9월 21일 열린 제1644차와 제1645차 회의에서(CRC/C/SR.1644 및 CRC/C/SR.1645 참조) 대한민국의 제3,4차 통합 정기보고서(CRC/C/KOR/3-4)를 심의했으며, 2011년 10월 7일 열린 제1668차 회의 (CRC/C/SR.1668 참조)에서 다음의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I. 도입

2.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의 보고지침에 따라 제3, 4차 통합 정기보고서 (CRC/C/KOR/ 3-4) 및 쟁점목록에 대한 서면답변(CR/C/KOR/Q/3-4/Add.1)을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분석적이고 자기비판적인 성격을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의 대표단과 가진 건설적인 대화에 대해 감사히 여긴다.

II. 대한민국이 취한 후속조치 및 이룩한 성과

3. 위원회는 다음 법안의 채택을 환영한다.
 - (a) 2011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
 - (b) 2011년 9월 개정된 민법
 - (c) 2011년 3월 개정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d)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e) 2010년 3월 개정된 가사소송법
 - (f)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g) 201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 (h) 2011년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4.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다음의 조약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
- (a) 2008년 12월 11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 (b) 2006년 10월 18일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5. 위원회는 또한 다음의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 (a) 2010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III. 주요관심분야 및+ 권고사항

A.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위원회의 기존 권고사항

6. 위원회는 당사국의 2차 보고서(CRC/C/70/Add.14, 2002년 6월 26일),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1차 보고서(CRC/C/OPSC/KOR/CO/1, 2008),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1차 보고서(CRC/C/OPAC/KOR/CO/1, 2008)를 심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사항(CRC/C/15/Add.197, 2003년 3월 18일)의 일부를 해결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우려 및 권고사항의 일부가 불충분하게 다뤄지거나 전혀 다뤄지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7.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권고사항,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의 설립,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 그리고 아동이 겪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유 보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9조 3항에 대한 유보를 2008년 10월 철회한 것을 환영한

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21조 (a)항에 대한 유보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이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를 유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9. 위원회는 협약의 완전한 적용에 장애가 되는 21조 (a)항과 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입 법

10. 위원회는 당사국 헌법이 협약을 국내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의 전반적인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가 불충분하고 당사국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한정된 예외상황 이외의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임신한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을 안전하지 않은 불법낙태 및/또는 학업중단 강요 및/또는 아이 입양 강요 등의 위험에 노출시켜 임신한 청소년이 처한 난국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
11. 위원회는 추가적인 관련 법 제정을 포함,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낙태관련 법률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하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여기에는 청소년 미혼모가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고, 불법낙태의 위험과 아이를 입양시키라는 강요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조정

12. 본 위원회는 당사국 내 협약이행 업무의 조정이 저하되었음을 우려하며, 이는 무엇보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08년 이래 운영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각기 다른 정부부처에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이 이행되어 정책분절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위원회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발족에 주목하나, 청소년 정책조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여전히 우려한다.
1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하여 강화고, 오히려 가급적이면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관련기구를 수립하라.
- b)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간, 그리고 관계 국가 및 지역 단체간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하라. 이 과정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취하는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라.

국가행동계획

- 14. 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2011이 2007년 5월에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포괄적이고 권리기반의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의 결여를 계속하여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 계획 만료 후를 위한 후속 국가행동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관련 파트너들과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협약의 전 부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과, 이를 위해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및 감시체제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덧붙여, 위원회는 시민사회 및 아동과 투명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2011년 이후 후속 국가행동계획 준비를 신속히 시작하도록 촉구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명명된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문서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 모니터링

- 16. 위원회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설립 및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위촉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 제도가 국가적 수준에서 협약의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 a)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법적 지위를 갖추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 받음.
 - b)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이 적극적으로 아동권리위반을 감시 및 조사하고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없음.
 - c)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임무권한은 당사국이 시행하는 연례성과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위원회는 또한 2009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21% 축소된 것과 이전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전문화를 이루지 못한 것에 우려한다.

17.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명확한 임무권한을 갖도록 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과 센터와 옴부즈퍼슨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협약위반을 감시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적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호(2002)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및 아동권리 관련 전문성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자원의 할당

18. 위원회는 사회분야 이행에 배정된 재원이 2008년 대비 16.5% 증가했음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이용 가능한 재원 대비 현재 배정된 재원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2009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서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재원의 수준에 있어 지역당국간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19.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좀더 걸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해 배정된 재원 수준을 검토하고 증가시켜라.
 - b) 아동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고 지역당국 및 지리적 위치에 따른 아동간의 격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으로 재원배정을 평가하라. 이를 위해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필요 정도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아동권리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재정배분을 설정하라.
 - c) 국가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아동권리접근법을 활용하라. 즉 예산 내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 위원회는 또한 분야별 투자가 어떻게 “아동의 최상의 이익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가늠하는 영향평가에 이 추적체계를 활용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여아 및 남아 간의 차이를 측정하도록 촉구한다.
 - d) 가능하다면,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기반 예산수립을 도입하라는 유엔권고안을 따르라.

- e) 특히 아동을 포함하는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보장하라.
- f)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를 필요로 하는 빈곤 혹은 취약계층 아동, 예를 들어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전략적인 예산 방안을 수립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 또는 다른 긴급상황에서도 이 예산이 지켜지도록 하라.
- g) “아동권리를 위한 재원 - 국가의 책임”에 관한 2007년 일반논의의날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하라.

자료수집

- 20. 위원회는 당사국의 자료수집방법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협약의 범주에 포함되는 분야별로 자료가 나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의 상대적 빈곤과 극심한 빈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당사국에 존재하나, 빈곤아동에 대한 자료가 없고 빈곤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 및 예산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한다.
- 21. 위원회는 협약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무엇보다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 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설립할 것을 대한민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자료에서 포착될 수 있는 경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과과정에 인권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 23. 위원회는 인식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그 중에서도 특히다음의 방안을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 a)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켜라.
 - b)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라.
 - c)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하라.

국제협력

24. 대한민국이 점진적으로 국제원조에 대한 기여를 증가시켜 왔음을 인식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제원조 기여가 약 0.13%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당사국이 2015년까지 도달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국민총생산 대비 0.7%라는 목표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0.7%에 2015년까지 도달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넘어서도록 독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과 체결하는 국제협력협약에서 아동권리의 실현을 중요 우선 순위가 되도록 할 것을 권장하며, 이 과정에서 협약 상대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권리와 재계

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인 당사국 재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재계는 환경문제에만 집중하는 듯 하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 중 특히 노동기준 및 최저임금을 다루는 부문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나, 당사국 영토 내 혹은 해외에서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경감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체계의 부재를 지적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의 우려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 a)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의회가 강제아동노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아동권리 위반에 연루된 상황이다.
 - b) 당사국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서 무엇보다 주거의 권리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임대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고되었다.
 - c) 당사국이 이미 체결했거나 체결을고려중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 전에 인권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보호, 존중, 구제” 체계 보고서를 채택한 유엔인권이사회의 2008년 결의안 8/7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설 실무그룹에 지시한 2011년 6월 16일 결의안 14/7은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모두 아동의 권리가 포함될 것을 언급하며, 이에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대한민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법 체제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기업사회책임 모델의 도입을 더욱 촉진하라. 여기에 보고를 위해 아동권리 지표와 매개변수가 포함되도록 장려해야 하며, 기업이 아동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b) 상품 유입을 감시하여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라.
- c)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업이 토착민이나 인권 및 아동권리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행하는 해외 정부와 협력하라.
- d)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하라.

B.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비차별

- 28.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안이 2007년 12월 국회에서 검토되지 않고 폐기된 것과 차별의 법률적 정의가 성적지향 및 국적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유감을 표시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 다양한 형태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러한 차별의 대상에는 다문화 또는 이주노동자가정, 탈북자가정, 난민가정 출신 아동 및 장애 아동과 미혼모, 특히 청소년 미혼모가 포함되며, 이들은 국가지원조치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
- 2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a) 협약 2조에 완전히 합치되는 법률의 채택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 b) 인식제고 및 대중교육 캠페인을 비롯,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c)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 미혼모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라.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4년 자살예방기본계획 등을 통해 청소년과 아동 자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심각하게 높은 자살률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31.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아동의 가정 내에서 그리고 교육제도 하에서 아동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당사국에 촉구하며,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적, 행정적 방안 이행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정책과 방안에 충분한 예방조치와 후속절차가 포함되고, 모든 관련 아동에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의 사회복지요원이 지원 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 의 원칙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아동관련 법령 내 아동의 최상의 이익 의 원칙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고, 아동 관련 사법, 행정결정 및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 본 원칙이 드물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한다.
33. 위원회는 당사국 내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 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모든 사법, 행정 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아동견해의 존중

34.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회의를 개최한 것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상의 절차나 사회적 태도 모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그들 자신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계속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35. 위원회는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12조에 합치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제시한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 (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라.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아동의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청문권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 (d) 아동의 청문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2009년)를 고려하라.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19, 37(a) 조)

출생신고

- 36. 위원회는 당사국의 현 법률 및 관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물학적 부모가 보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양부모나 정부당국요원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 미혼모 관련 상황을 포함, 적절한 사법감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입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 망명희망자, 또는 비정규 이주 상태의 사람에게는 출생신고가 사실상 또는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한다.
- 37. 협약 7조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의 법적 지위 및/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이러한 과정에서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히 명시되도록 보장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촉구한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내 의무종교교육을 금지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보나, 실제로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계속하여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학교에 자발적으로 입학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학생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현 계획안이 종교의 다양성을 조성

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촉진하지 않고, 식단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 특정 종교를 가진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더 나아가 협약 14조 3항에 따라 실제로 그리고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존중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또한 종교적 다양성의 존중을 촉진하고 식단조건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특정 종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의 형성을 이러한 조치의 목적으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40. 위원회는 과거 권고사항(CRC/C/15/Add.197, para.37)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여전히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도시 및 농촌지역 아동들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41.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반복하며, 협약 12조부터 17조에 비추어 당사국이 법률, 교육부 발행 지침 및 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아동이 교내 등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한다.

체벌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돌봄 환경에서 체벌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과거 우려사항(CRC/C/15/Add.197, para. 38)을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라. 그리고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
 - c)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44. 위원회는 당사국 내 육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제한적으로 정의되어있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내 괴롭힘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해왔다는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을 환영하나, 그 수가 제한적이며 재원과 인력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의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4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자의 신원 및 안전을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교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하라.
 - b) 지역 시설을 포함,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을 제공하는 등 이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하라.
 - c)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하라.
46. 유엔사무총장의 아동폭력보고서(A/61/299)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독려한다.
 - a)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의 이행을 비롯, 성별에 특히 유념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우선시하라.
 - b) 특히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강조한 다음의 사항을 비롯하여,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라.
 - (i)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의 개발
 - (ii)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의 도입
 - (iii) 자료 수집, 분석, 보급 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관련 연구의제 통합
 - c)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관련 기구,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비정부기관 파트너와 협력하고 이들 기구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D.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협약 5, 18(1-2), 9-11, 19-21, 25, 27(4) 및 39조)

가정환경상실아동

47. 위원회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족과 같은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과 이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건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대안 돌봄시설에 대한 평가는 오직 행정운영만을 평가하며, 보육, 보육담당자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훈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하며 지적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러한 시설 내 학대 및 방임사건을 다루기 위한 진정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하며,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동을 위한 추적제도의 부재에도 우려를 표한다.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서비스의 질,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등에 대해 받는 정기적인 교육, 공립 및 사립 대안돌봄기관 내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유형을 협약 25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 b)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학대 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 c) 대안돌봄 환경 내 아동이 부모를 찾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한다
 - d) 2009년 11월 20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 대안 돌봄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하라.

입양

49. 위원회는 발효되면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도록 한 당사국의 입양특별법 및 민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본 안이 발효되기 전 과도기간의 아동입양의 경우에 대해 염려하며, 다음의 사항에 여전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
 - a) 명시적으로 임무권한이 부여된 입양관련 규제감독 중앙기구 및 주무당국이 해외 입양절차에 개입할 의무를 성문화한 법률의 부재
 - b) 13세 미만 아동의 입양 시 아동 의사청취의 부재
 - c) 압도적 대다수의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가 입양되며, 청소년 미혼모의 동의 없이

이들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d) 하여, 입양 후 서비스의 부족, 특히 해외 입양아동과 생물학적 출신에 대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언어문제 해결을 포함.
- e) 당사국이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음

50. 위원회는 아동특례법이 발효되기 전 입양의 경우에도 충분하고 동일한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자국의 해외입양제도가 특히 21조를 포함한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합치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해외입양제도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촉구한다.

- a) 한국 중앙입양정보원이 헤이그 협약 6조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임무권한을 규정하고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라. 여기에는 입양 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 수 있는 해외 입양된 이들이 이러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b)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과하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가장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하라.
- c) 청소년 미혼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들의 자녀를 입양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동의가 사실상 또는 실질적으로 강요에 인한 것이 아니도록 하라.
- d) 해외입양을 포함 모든 입양이 명확한 임무권한을 가지고 사법적 감독과 규제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라.
- e)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라.

E.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장애아동

51. 위원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에만 제공되고, 물리치료 및 직업훈련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아동, 특히 여성장애아동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 특수교육 교사와 감독관의 부족, 그리고 장애아동의 대부분이 장애가 없는 아동들과 분리되어 특수학교나 학급에서 교육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려한다.

5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06년 채택된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9호(CRC/C/GC/9)를 고려하고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a) 모든 장애아동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라.
- b) 장애아동의 교육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애아동이 교육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며 교사와 감독관에 적절한 교육연수를 제공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하라.
- c)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라
- d) 가능한 경우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건강 및 보건 서비스

53.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건예산을 증액하고 건강보험 제공을 위해 특별예산을 배정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의료수급자 지원사업, 공공 금연캠페인, 그리고 영유아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총예산 대비 보건예산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대형병원과 소규모 지역병원 간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의 가용성과 진료수준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에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고,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하라는 과거 권고안(CRC/C/15/Add.197, para. 49(a))을 반복한다. 또한 전 지역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 지원을 늘리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정신건강

55. 위원회는 특히 전국에 걸쳐 32개의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 전반적인 아동정신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아동, 특히 여아의 우울증 비율과 자살률이 증가해왔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자살위험자 조기발견과 자살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도입한 것에 주목하나, 이러한 진단검사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56.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 우울증 및 자살 근본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정신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자살 행동, 특히 여아의 자살행동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활동과 외래 및 입원환자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며,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시설수용은 최대한 피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자살위험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정신건강접근법에 추가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이를 대체하여 자살관련 사회적, 가정적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청소년 보건

57. 위원회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이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에서 비롯된 비만 및 여타 건강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에 우려를 표시한다.
58.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의무 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안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 및 생식 보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내 교육이 여전히 부족함을 우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계획되지 않은 청소년 임신율이 높고 이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의 낙태율 역시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한다.
59. 위원회는 담배,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언론 등을 통해 정보 및 교육캠페인을 늘릴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캠페인이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소비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돕도록 하며, 아동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식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60. 위원회는 헌법 제34조 3, 4, 5항에 따라 여성,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당사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아동복지증진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한다.
61. 위원회는 적절한 수준에서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아동복지지원 배정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당사국이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국은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

F.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협약 28, 29, 31조)

직업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교육

62. 위원회는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려는 당사국의 노력과 아동이 놀이, 오락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교육제도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과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염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사교육비로 인해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아동 권리의 충분한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괴롭힘, 특히 외국 출신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의 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것과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 휴대폰과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63.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협약 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1 (2001)을 고려하여, 현 교육 및 관련 시험 제도를 평가하라.
 - b)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의 근본 원인과 사교육에서 비롯되는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라.

- c)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 d) 당사국의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룩하는 데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라.
- e) 학생간 괴롭힘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시도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 운동장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한다.

G.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8, 39, 40, 37(b)-(d) 및 32-36조)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 64. 위원회는 당사국 법률이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난민아동과 망명희망아동에게 시민 지위 증명서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망명희망자와 인도적 지위자의 노동시장 접근 제약과 생계보조금 부족으로 이들 자녀의 취약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의 학교입학이 부모의 체류상태에 따라 결정되어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의 교육접근이 제한돼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난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이나 망명희망자와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난민의 권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 65. 위원회는 난민 및 망명희망자의 자녀를 포함,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등록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망명희망자와 인도적 지위자의 가족에 충분한 재정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공무원, 특히 난민 및 망명희망자와 접촉하는 이들에게 난민의 권리에 대한 특별 교육연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 66. 또한, 위원회는 난민아동, 망명희망아동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당사국 이민법에 따라 구금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 경우 아동에게 부적절한 시설에 구금되며, 본국송환 명령 집행이 미정인 경우 구금일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구금에 대한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조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67. 위원회는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한다.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이러한 아동이 가능한 한 그들의 권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며, 최대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 상황의 아동

68. 위원회는 당사국이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도록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채택하고 불법체류자 자녀의 학교 입학과 전학을 허용하도록 2008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아동의 등교율이 여전히 낮고, 자녀가 초, 중학교를 다니도록 해야 하는 부모의 법적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부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한다.
69. 위원회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교육에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이 협약 조항에 합치되도록 할 것을 독려한다.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착취방지를 위한 2005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 수립을 환영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 a) 근로아동의 수 증가
 - b) 아동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15세가 넘는 아동을 야간 근무시키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주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관련 기준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 c)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과 같은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 불충분
 - d) 노동 감독 불충분
 - e) 만연한 언어적, 성적 학대 및 폭력 발생으로 인한 근로아동 문제 악화
 - f) 연예인이나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의 수 증가
71.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 b) 야간근무금지의 효과적인 시행과 최저임금 지급 등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라.
- c)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하라.
- d)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하라
- e)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묻고 재발을 돕는 효과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

성적착취

72. 위원회는 아동 성 착취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에 임시 및 긴급 생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008년 개정안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성범죄 피해아동의 상담, 보호, 치료 및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한다.
 - a) 아동 성폭력 급증과 높은 음란물 소비율
 - b)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 c) 남아 또는 남성 대상 및 외국어로 진행되는 피해자 재활 서비스 부족
 - d) 아동학대 범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의 삭감
73.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법이 협약 35조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2조 및 3조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a)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 b)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 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라.
 - c)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수준의 처벌이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라.
 - d) 형사책임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 e)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신매매 및 성 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며 이러한 지원활동이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인신매매

74. 위원회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채택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 법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으나, 다수의 여성 및 아동이 성 착취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한국을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신매매범의 기소율 및 유죄율이 낮다는 사실에 특히 우려를 표시한다.
7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76.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이 의정서 2조와 3조에 명시된 범죄 모두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반복한다(CRC/C/OPSC/KOR/CO/1, para. 30). 또한, 위원회는 앞서(para. 35) 언급된 제3자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방지할 조치의 부재가 아동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선택 의정서 3조 1항과 관련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외국에서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의 확립을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대한민국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CRC/C/OPSC/KOR/CO/1, para. 38).
77.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반복한다.
- a) 당사국의 국내법이 선택의정서 2조와 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 b) 선택의정서 4조 2항에 의거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라(CRC/C/OPSC/KOR/CO/1, para. 39).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78. 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참여 혹은 강제 징집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CRC/C/OPAC/KOR/CO/1, para.12).

7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권고 사항을 반복한다.

- a)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하라.
- b)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라(CRC/C/OPAC/KOR/CO/1).
- c) 모든 군사법, 매뉴얼 및 여타 군사 지침서들이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되도록 하라(CRC/C/OPAC/KOR/CO/1, para.13).

소년사법운영

80. 위원회는 당사국 내 청소년 비행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재범률 등 청소년 범죄율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비행아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을 다루기 보다 성인 구금시설에 비행아동을 구금하는 등, 아동 범죄자를 사회가 효과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조치 대신 징계조치를 늘리는 식으로만 청소년 범죄 대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청소년전담검사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들이 실제 소년사법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받지 않아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81. 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및 높은 수준의 재범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소년사법제도를 특히 37조, 39조 및 40조를 비롯한 협약과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리야드 가이드라인), 피구금소년보호규칙(하바나규칙), 형사사법제도 하에서의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 청소년 사법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2007) 등을 포함한 여타 관련 기준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a)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하라.
- b)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 지원을 법적 절차 초반과 전반에 걸쳐 제공하라.
- c)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시설 혹은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절대로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받고,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음식,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

- d)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 e)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박탈 대신 다이버전(diversion),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 다른 대안을 장려하라.
- f) 유엔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간 패널과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비정부기구 등 패널 회원기구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패널 회원기구로부터 청소년사법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 8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6세 이하 아동 피해자와 목격자가 영상물 녹화로 진술을 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심문 및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부적절하다.
 - a) 관계자들이 영상물 녹화에 능숙하지 않아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b) 법원이 영상 진술자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 c) 피해자와 목격자가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환경에서 반대심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 d)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된다.
 - e) 피해자 프라이버시를 위한 보호장치가 불충분하다.
 - f) 경찰관과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 g) 의료진 및 법집행관이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 83. 위원회는 아동친화적인 절차구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피해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이 더 존중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적절한 법 조항과 규정을 통해 모든 피해아동과 범죄목격자 아동, 즉,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 등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와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이 아동범죄피해자와 증인관련문제에서의 유엔 사법지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의 부록)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H.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

- 84.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의 실현을 더욱 강화하도록,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포함, 모든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I.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8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내에서 협약과 여타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해 아세안여성아동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J. 후속조치 및 배포

86. 위원회는 특히 정부, 국회, 지역기구 및 기타 지방정부에 본 권고사항을 전달하여 이를 고려하고 추가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권고사항이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87.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3, 4차 통합 정기보고서, 서면답변 및 위원회가 채택한 관련 권고사항(최종견해)이 대한민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인터넷과 여타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전문가 단체 및 아동에 널리 제공되도록 하여,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본 협약과 이의 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K. 차기 보고서

88.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제5, 6차 통합정기보고서를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10년 10월 1일에 채택된 협약별 보고지침(CRC/C/58/Rev.2)에 주의하고, 향후 보고서가 본 지침을 준수하여 60쪽을 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고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분량 제한을 넘기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당사국에 보고서를 검토하고 위에 언급된 지침에 맞추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만약 당사국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조약기구의 검토를 위한 보고서의 번역이 보장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소개 및 전문가 토론회

•발 행 일 : 2011년 12월 20일

•발 행 인 : 변 주 선

•편 집 인 : 임 송 자

•발 행 처 : 한국이동단체협의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960-4호

전화 / (02) 831-1930~1

팩스 / (02) 831-1932

홈페이지 / www.KOCCONet.or.kr

본 자료집의 내용을 허가 없이 무단 복재와 전재를 금합니다

